지방의 선택! 희망2007

대선 앞으로 6개월 판도 좌우할 4대 변수

17대 대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범여권의 구도는 혼미 덩어리다. 범여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원웅 김혁규 신기남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유시민 김두관 전 장관(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김두관 전 장관 출판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 단일후보 나오면 李-朴 누를까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19일로 꼭 6개월 남았다. 대선이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권은 유력 후보는 커녕 각개약진의 혼동에 빠져 있는 반면, 야권 후보가 70%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등 역대 다른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여권 성향의 호남 민심은 갈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많다. 검증을 둘러싼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간 공방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고, 범여권이 대통합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가능성도 크다. 올 대선 판도를 결정할 4대 변수와 전망을 살펴본다.

❶ 진흙탕 검증공방

"더티 워(Dirty War·추악한 전쟁)가 시작됐다." 최근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공방이 청와대와 범여권까지 얽히면서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범여권 핵심 인사가 의미심장하게 던진 말이다.

이번 대선이 추악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근거로는 범여권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점이 꼽히고 있다.

우선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범여권의 분열로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정서가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범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대선에서 국민의 여망이었던 정권 교체(국민의 정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에서는 적극적인 검증 공세로 국민 정서를 자극, 한나라당 '빅2' 후보들의 지지율을 30% 이하로 끌어내려 막판 대역전극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검증 공방을 통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이번 대선은 상대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보다는 각종 정치적 의혹과 과거 문제를 둘러싼 추악한 폭로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범여 적극적 검증 공세
막판 대역전극 노려

❷ 범여권 단일후보 나올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이 단일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여권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대선 국면이 범여권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단일 후보를 선출에 반대함에 따라 범여권 후보가 복수로 출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선 패배의 책임은 물론 민주세력 집권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치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범여권의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은 후보 단일화보다는 대통합을 통한 국민경선에서의 후보 선출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후보 단일화의 경우, 복수의 범여권 정당 후보가 여론조사 및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상호 이질적인 정당이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상호 협력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범여권 구도로는 강경 친노세력과 개혁당 출신 의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통합을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 국민 경선보다는 결국 후보 단일화를 통한 단일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도 있다.

대통합 어려워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 커

❸ 지역주의속 호남 민심은

이번 대선에서도 민감한 변수며 대선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범여권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과 충청, 여기에 수도권이 연계되는 서부벨트 복원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충청 출신 대선주자론과 함께 이해찬 전 총리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에 근거한다.

서부 벨트가 복원되고 영남에 뿌리내린 호남 출신(영남 유권자의 13~17%)에 영남 지역 민주개혁세력(영남 유권자 10%)이 함께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여권에서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승리한다면 영남 고립화를 통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근거한 서부벨트 복원론은 필패 구도며 한나라당과 차별적인 노선과 정책적 이슈 제기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대선 필승 전략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지역주의에 매달리면 민주 세력은 백전백패라고 강조한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광대 특강에서 "지난 97년 대선에서 호남과 충청이 손잡아서 이겼다고 하는데 이인제씨가 동쪽에서 500만 표를 깨주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체성과 이슈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민주세력의 대선 승리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체성·이슈로 승부
지역주의 없애야 승산

❹ DJ·노대통령 영향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은 범여권 대통합을 비롯, 이번 대선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범여권의 대통합과 단일 후보론을 역설하며 정치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노 대통령도 한나라당과의 대립 전선 최전방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김심(金心·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과 노심(盧心·노대통령의 의중)의 대선 접근 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장 대선 전략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이 지역 연합을 상수로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 대통령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이슈 메이킹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DJ가 지역적 기반 위에 이념적 이슈를 덮어 한나라당 후보와의 대결하는 방식(서부벨트론)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노 대통령은 정책 이슈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사수파들과 외길 수순을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선 승리에 대한 방법론은 다르지만 최종 목표가 한나라당 집권 저지가 목표라는 점에서 김심과 노심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金·盧心 결국 협력할 것
한나라 집권 저지 목표

물동량 첫 감소…비상 걸린 광양항

열악한 경영환경 방치 정부 '투포트' 손 놨나

부산항 컨테이너세 폐지 유탄

광양항의 물동량이 사상 첫 감소세를 보인 것은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시에 동북아 허브(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참여정부의 투포트(Two Port) 정책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역 내 수출물량 감소, 대형 화물선사의 이탈 등이 물동량 감소의 주된 이유로 꼽히고는 있지만, 정부에서도 부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한 광양항의 여건을 보완·강화해주기는 커녕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신항의 경우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2만 원씩 부과되던 컨테이너세가 지난해 폐지된 이후 올 1월에는 북항에서도 폐지됨으로써 물동량 급증세를 이끌어냈다.

부산시는 '컨테이너세가 부산항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항만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세인 컨테이너세를 폐지,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부산항은 이와 함께 선석이 부족한 광양항에서 화물 처리작업을 하느라 애를 먹던 대형 화물선사 '머스크라인'을 유치, 물동량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계획항만으로써, 처음부터 컨테이너세를 받지 않아오던 광양항은 이번 부산항의 컨테이너세 폐지조치로 인해 '물동량 유출'이라는 유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1선석에 불과한 작업공간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느라 어려움을 겪던 머스크라인을 지난해 말께 부산항에 내줌으로써 물동량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광양항 측은 지역 내 수출물량 감소가 광양항 물동량 감소의 큰 이유이긴 하지만, 부산항의 컨테이너세 폐지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항에 비해 작은 선석수와 열악한 작업환경도 대형 선사의 이탈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는 결과적으로 부산항에 비해 열악한 광양항의 운영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투포트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광양항의 기능을 보완하고, 선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양항은 지난 98년 개항 이래 대 중국 물류기지로서, 부산항과 함께 정부의 양항(兩港)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2선석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16선석이 운영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로는 1단계 5천165억 원, 2단계 2천374억 원, 3-1단계 3천770억 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1천39억 원이 투입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포문화수도 조성위원

문순태씨 등 10명 위촉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공석중인 제2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조영택 위원장) 위원으로 소설가 문순태씨 등 10명을 위촉했다고 문화관광부가 밝혔다.

문씨와 함께 위촉된 신임위원은 김상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상임이사, 김필식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노은희 조선대 미대 디자인대학원장, 건축가 승효상씨, 우운택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학과 교수, 이강복 CJ(주)글로벌 부사장, 임낙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정기용 기용건축사무소 소장, 천득염 전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다.

이번 위촉은 조성위 민간위원 중 최협 전남대 교수 등 7명의 광주지역 위원들이 송재구 전 조성위원장에 대한 해촉에 반발, 지난 4월 집단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청와대는 이들 7명의 민간위원 외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2명의 민간위원 등 9명의 공석에 1명을 추가, 총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또 제2기 조성위부터는 특별법에 근거해 박준영 전남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